

## 제2이미지를 통해 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대내 취약성과 대외 과소균형\*

박홍서(동서대학교 학술연구교수)

### 논문요약

본 논문은 임진왜란 및 병자호란의 차단 실패를 조선 내 엘리트 분열과 정권 취약성으로 인한 과소균형의 결과로 설명한다. 임란 이전 선조 정권은 내 동서 붕당 간 첨예한 대립으로 일본의 위협 자체에 대한 정파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또한 선조 정권은 내부로부터의 위협 차단을 우선시함으로써 일본에 대해서는 통신사 파견과 같은 과소균형 행태를 보였다. 호란 시기 인조 정권내 정치세력은 후금의 위협에 대해서는 일정한 합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대명 의리라는 반정 명분을 내세운 인조 정권의 취약성은 전면적인 유화책을 통한 전쟁 차단이 아니라, 상호 모순된 대후금 정책을 초래하였다. 향후 한반도 안보 전략 수립은 안보문제의 정쟁화를 방지하고,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합리적 논쟁에 기반해야 한다.

주제어: 제2이미지, 국내정치, 허용적 원인, 과소균형, 임진왜란, 병자호란

---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106912).



## I.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임진왜란 및 병자호란 시기 한반도 국내정치와 대외전쟁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조선이 왜 전쟁 전 일본과 후금에 대한 세력균형에 실패하였는지를 설명한다. 이를 위해 스웰러(Randall L. Schweller)가 제시한 ‘과소균형(under balancing)’ 개념을 기반으로 조선의 국내정치와 전쟁 방지 실패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임진왜란(이하 임란)과 병자호란(이하 호란)의 원인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전쟁 개시국인 일본 및 후금의 의도나 목표 등에 분석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임란의 원인에 관해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영웅심 혹은 망상과 같은 개인 수준의 설명에서부터 대외전쟁을 활용해 국내 위협세력의 제거를 도모했다는 일본 국내정치 수준의 설명, 영토확장이나 해외무역의 확대라는 일본 국가전략 차원의 설명, 그리고 일본 특유의 침략문화라는 정체성 차원의 분석 등이 존재한다.<sup>1)</sup> 호란의 원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흥타이지의 국내정치적 위상 강화라는 개인 수준에 주목하거나,<sup>2)</sup> 후금 사회의 기근 및 한인들의 도망 등으로 인한 국가 수준의 경제위기에 분석 초점을 맞춘다.<sup>3)</sup> 또한, 모문룡(毛文龍) 문제나 정책결정자들의 ‘집단사고(group thinking)’와 같은 인지 수준의 변인에 주목한다.<sup>4)</sup>

이들 연구에 비해 임란 및 호란의 원인을 조선 국내정치의 맥락에서 설명하려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소수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란 전 조선이 일본

1) 한일 역사학계의 임란 원인 연구에 대한 개괄은 최소자, 『명청시대 중한관계사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7, p. 23; 김문자, “임진왜란 연구의 제문제: 임진·정유재란 발발 원인에 대한 재검토.” 『한일관계사연구』 제67집, 2020, pp. 143~152; 이계항, “한국과 일본학계의 임진왜란 원인론에 대하여,”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2권, pp. 53~87.  
<https://www.jkcf.or.jp/wordpress/wp-content/uploads/2010/10/2-06k.pdf> (검색일: 2022.3.15.) 참조.

2) 구병진, 『병자호란, 흥타이지의 전쟁』, 서울: 까치, 2019, pp. 64~71.

3) 김종원, “정묘호란시의 후금의 출병동기.” 『동양사학』 12, 1978, pp. 89~91.

4) 한명기,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서울: 푸른역사, 2009, pp. 89~155; 박현모, “10년 간의 위기: 정묘·병자호란기의 공론정치 비판.” 『한국정치학회보』 제 37집 2호, 2003, pp. 27~46.

으로부터 은의 유입이나 민간무역을 억압함으로써 경제발전 기회를 상실했다는 분석이나,<sup>5)</sup> 봉당정치의 폐단과 사회 혼란, 비합리적 대명 사대사상이나 국방정책 부재 등에 대한 분석들이 존재한다.<sup>6)</sup> 이들 연구는 대부분 역사학 기반 연구로서 ‘풍부한’ 사실관계에 주목하고 설명한다는 강점이 있으나, 국제정치학 이론에 기반해 분석의 ‘엄밀성(rigorousness)’을 추구하는 본 논문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sup>7)</sup>

물론,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임진왜란을 분석한 연구 역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임란 시기 한반도 분할에 관한 명-일 간 협상을 분석한 연구나,<sup>8)</sup> 임란을 명과 조선의 ‘천자(天子)’ 중심 세계관과 ‘신국(神國)’ 관념에 기초한 일본 중심 세계관이 충돌한 사건으로 설명한 연구 등이 그것이다.<sup>9)</sup> 또한, 동맹안보 딜레마(alliance security dilemma) 이론을 통해 호란을 조선-명 사이의 동맹게임과 조선-청 사이의 적수게임으로 분석하거나,<sup>10)</sup> 임란과 호란을 포함한 한반도 전쟁을 한반도-중국-북방 유목세력 간 세력변화의 결과로 설명하는 연구가 존재한다.<sup>11)</sup> 그러나 이들 연구는 본 논문과 달리 조선의 국내정치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차별적 문제의식에 기반해 본 논문은 국제정치 이론을 기반으로 임란 및 호란 시기 조선의 국내정치와 대외균형 실패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우선, 2장에서 본 논문은 월츠(Kenneth N. Waltz)가 제기한 분석수준 문제 및 과소균형에 대한 스웰러의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국내정치와 대외전쟁

- 
- 5) 춘경장개, “임진왜란의 역사적 전제 : 일조관계사를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제 7집, 1997, pp. 15~35.  
 6) 이계황, “한국과 일본학계의 임진왜란 원인론에 대하여.” p. 57; 한명기, “임진왜란과 동아시아질서.” 한일 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편,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서울: 경인문화사, 2005, pp. 108~111.  
 7) 험펠(Karl Hempel)은 역사학 연구가 과학적 설명의 필수 요소인 일반법칙과 초기조건을 명시하지 않으므로써 ‘설명스케치(explanation sketch)’에 가깝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칼 구스타프 험펠 지음, 전영삼 외 옮김, 『과학적 설명의 여러 측면 2』, 파주: 나남, 2011, pp. 17~29.  
 8) 이완범, “임진왜란의 국제정치학: 일본의 조선분할요구와 명의 對조선 중주권 확보의 대립, 1592-1596.” 『정신문화연구』 제25권 제4호, 2002, pp. 89~137.  
 9) 김명삼-김석원, “관념 충돌로서의 전쟁.” 『국제정치논총』 53집 3호, 2013, pp. 103~146.  
 10) 김영환, “적대국-동맹국 게임을 통한 병자호란 발발 원인 재해석.” 『한국군사학논집』 vol. 76, no. 2, 2020, pp. 51~77.  
 11) 이삼성, 『동아시아 전쟁과 평화 1』, 파주: 한길사, 2009, pp. 12~13.

의 상관관계를 검토할 것이다. 3장에서는 임란과 호란의 구체적 배경 및 과정을 분석하며, 결론에서는 그 현재적 함의를 간략히 제시할 것이다.

## II. 국내정치와 대외 과소균형

월츠(Kenneth N. Waltz)는 전쟁 원인을 ‘이미지’로 표현되는 3가지 분석수준으로 설명한다.<sup>12)</sup> 제1이미지가 고전 현실주의 등이 주장하는 인간의 속성(본성)이라면, 제2이미지는 국가속성으로 정치·경제 체제나 정체성, 그리고 이데올로기 등을 의미한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이나 세계전쟁을 제국주의 국가간 충돌로 해석한 레닌의 설명은 2이미지 분석에 해당한다. 제3이미지는 국가간 세력 변인으로서, 예를 들어 나치 독일에 대한 세력균형 실패가 2차 세계대전을 초래했다는 설명은 3이미지 분석에 해당한다.

이러한 분석수준 중 월츠는 3이미지를 전쟁의 핵심 원인으로 간주한다. 월츠에 따르면, 인간의 악한 본성(1이미지)이 전쟁을 초래한다는 논리는 국가간 평화시기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sup>13)</sup> 또한, 2이미지 분석은 민주공화국 간의 세계대전이나 중소분쟁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간 전쟁을 설명하지 못한다.<sup>14)</sup> 월츠는 1, 2이미지를 통해 전쟁을 분석하려는 행태를 환원주의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궁극적으로 국가간 세력배분이라는 구조요인을 강조한다. 국가들은 무정부 상태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상호간 세력관계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sup>15)</sup>

물론, 월츠가 국가간 세력 변인만을 전쟁의 유일한 원인으로 설명하는 것은

12) Waltz, Kenneth N.,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9.

13) Waltz, Kenneth N., *ibid.*, p. 29.

14) Waltz, Kenneth N., *ibid.*, p. 121.

15)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Leading: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9, pp. 88~101.

아니다. 그는 세력배분으로 모든 국제정치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떨어지는 낙엽의 경로를 중력 이론 하나만으로 설명하려는 것과 같으며, 결국 환원주의의 오류를 뒤집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경고한다.<sup>16)</sup> 예를 들어, 세력변화의 논리만으로 보면 19세기 후반 통일 독일의 부상과 독불전쟁(1871)의 승리는 대독 동맹의 형성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비스마르크의 기민한 외교술이라는 단위수준의 변인이 대독 동맹 수립을 차단하였다는 것이다.<sup>17)</sup>

이러한 맥락에서, 월츠는 국가간 세력 변인을 전쟁의 ‘허용적 원인(permissive cause)’이라고 설명한다. 즉, 은행 강도가 아무리 범행 의지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방비가 엄중하다면 범행에 나설 수 없는 것과 같이, 전쟁 개시국의 전쟁 의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전쟁 방어국의 물리적 억지 능력이 충분하다면 전쟁은 현실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sup>18)</sup>

임란 및 호란의 사례에서도 일본과 청(후금)의 전쟁 의지가 아무리 강했다 하더라도 양국의 전쟁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전쟁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동일한 맥락에서, 전쟁 전 이들 국가에 대한 명과 조선의 억지 능력이 확고했다면 전쟁은 발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론 역시 가능하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양 사례에서는 명의 세력 약화와 조선의 억지력 확보 실패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모두 임란과 호란의 허용적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전쟁 이전 일본과 후금의 세력확장 및 위협이 명확해지는 상황에서 조선은 왜 전쟁 억지에 실패하였는가? 사실, 전쟁 이전 조선에서는 내정 개혁 및 국방력 강화 등을 통한 전쟁 대비에 관한 주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임란 전 이이는 조선의 상황을 ‘기절한 사람이 겨우 소생한 상태’ 혹은 ‘중쇠기(中衰期)’로 규정하면서 국가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호란 직전 대사간 이식 역시 군정 및 재정 개혁을 통한 국력 신장을 주장하였다.<sup>19)</sup> 그럼에도

16) Waltz, Kenneth N, *ibid*, p. 72, 121.

17) Waltz, Kenneth N., *Realism and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Routledge, 2008, p. 54.

18) Waltz, Kenneth N., *Man, the State, and War*, p. 232.

19) 이이 지음, 안외손 옮김, 『동호문답』, 서울: 책세상, 2005, pp. 45~46; 한명기, “임진왜란과 동아시아질

이러한 정책제의들은 채택되지 않았으며, 이는 결국 임란과 호란의 허용적 원인이 된 것이다.

스웰러가 제시한 ‘과소균형(underbalancing)’ 개념은 조선의 전쟁 차단 실패에 관한 분석에 유의미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스웰러에 따르면, 과소균형은 위협국가에 대해 균형전략을 구사하지 않거나, 구사하나 효과적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책임회피, 거리두기, 숨기, 기다리기, 유화책, 편승, 그럭저럭 버티기(muddling through), 혹은 효과가 없는 반쪽짜리 조치들(ineffective half measures)을 의미한다.<sup>20)</sup> 구조적 세력균형 이론의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과소균형은 과잉균형(overbalancing)과 마찬가지로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비합리적 행태라 할 수 있다. 과잉균형이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과도한 균형전략을 추구해 국가간 안보경쟁을 초래한다면, 과소균형은 애초 저비용으로 차단할 수 있었던 안보위기를 증폭시키기 때문이다.<sup>21)</sup> 월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개별 국가들은 세력균형 논리에서 이탈해 자의적인 대외정책을 선택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비합리적 행위로 초래되는 생존 위험은 회피할 수 없다.<sup>22)</sup>

스웰러는 월츠의 경고에 동의하면서도 과소균형 행태를 단순히 국가들의 ‘우둔한(foolish)’한 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보다 국내정치 변인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sup>23)</sup> 스웰러는 국내정치 변인으로 4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엘리트 응집력(elite cohesion)’으로 이것은 파벌, 종교, 계급, 지역 등으로 인한 엘리트(정책결정자)들 간 분열 수준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 응집력(social cohesion)’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제도를 상호간 분쟁의 중재 기제로 인정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사회제도가 정당한 중재 기제로 인정되면 될수록 사회응집력의 수준은 증가한다. 셋째, ‘정권의 대

서.”, p. 111.; 『인조실록』 14년(1636) 9월 13일 갑인.

20) Schweller, Randall L., *Unanswered Threat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p. 7.

21) Schweller, Randall L., *ibid.*, p. 10.

22)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p. 128.

23) Schweller, Randall L., *Unanswered Threats*, pp. 15~16.

내 취약성(government vulnerability)'으로 통치안정성을 의미한다. 즉, 통치안정성은 정권이 국내 정치세력 및 기층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에 얼마나 안정적인가의 문제가 된다. 넷째, '엘리트 합의(elite consensus)'로 외부위협에 균형 전략을 취할 것인가에 관해 정책결정자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즉, 외부위협이 존재한다고 엘리트들은 합의하는가? 그러한 합의가 있다면, 그 구체적 대응전략에 대해서도 합의하는가?와 같은 문제가 된다.<sup>24)</sup>

스웰러에 따르면, 이들 변인은 '가산적(additive)'인 성격을 갖는다. 즉, 어느 한 변인이 극단적으로 큰 경우 과소균형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각 변인들이 추가되면 될수록 과소균형 가능성이 그만큼 더 증가한다. 결국, 엘리트 및 사회 응집력이 약하며, 정부의 대내취약성이 크고, 균형전략에 대한 엘리트간 공감대가 약할수록 과소균형의 가능성은 극대화된다고 할 수 있다.<sup>25)</sup>

본 논문은 이러한 4가지 변인을 그 성격의 유사성이라는 측면에서 2개의 변인으로 간결화한다. 우선, 엘리트 응집성 및 엘리트 합의 수준은 동일한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외부위협에 대해 어떠한 전략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결정자들간 합의 수준은 결국 엘리트 응집성의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스웰러는 외부위협에 대한 정보가 명확할수록 엘리트간 합의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또한 정책결정자들의 위험회피 성향이 강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고 비용과 효용에 대한 잘못된 계산 등이 더해질 때 균형전략에 대한 합의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한다.<sup>26)</sup> 그러나, 상호 경쟁하는 정치세력들이 자파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의도적으로 '가공'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사실은 외부위협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합리적인 과정이라 볼 수 없음을 시사한다.<sup>27)</sup> 즉, '진영논리'가 정보의 명확성을 압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24) Schweller, Randall L., *ibid.*, pp. 47~55 / 66~68.

25) Schweller, Randall L., *ibid.*, p. 16.

26) Schweller, Randall L., *ibid.*, p. 47~48.

27) Lebow, Richard Ned, "The Deterrence Deadlock: Is There a Way out?" *Political Psychology*, Vol. 4, No. 2, 1983, pp. 334~335.

아울러, 사회응집력과 정권의 대내 취약성 역시 그 속성상 하나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사회응집력이 정당한 중재기재로서 사회제도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 간 동의수준이라면, 그러한 제도를 유지·관리하는 정권의 대내 취약성이 클수록 사회응집력 역시 약화되며 그 역관계도 성립가능하다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응집력과 정권 취약성의 밀접한 상관관계는 대외 안보 위기 상황에서 보다 명확하게 나타난다. ‘주의전환(disversionary)’ 이론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대외분쟁은 대내 응집력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외분쟁은 체제 결속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sup>28)</sup> 반면 분쟁 전 정권의 취약성이 극도로 크거나 사회응집력이 약하다면, 대외분쟁은 오히려 부정부상태를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sup>29)</sup> 특히, 내부위협이 극대화될 경우 정권이 동맹국의 지원을 통해 그에 대응하려 하는 것과 같이, 정권의 반대세력 역시 외부와의 연계를 통해 정권에 대항할 가능성도 상존한다.<sup>30)</sup>

이러한 맥락에서, 임란과 호란 시기 조선은 엘리트 분열과 정권의 대내 취약성이 동시에 나타난다. 임란의 경우 동서 봉당간 대립이라는 엘리트 분열이 극대화되면서 일본의 침공가능성에 대한 합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면서 과소균형이 발생하였다. 반면, 호란의 경우 후금이 위협적이라는 엘리트간 합의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정 정권에 내재한 정치적 취약성으로 인해 과소균형이 초래되었다.

28) 주의전환 이론에 대해서는 Levy, Jack S., “The Diversionary Theory of War: A Critique.” *In Handbook of War Studies*, In Manus I. Midlarsky, eds., Boston: Unwin Hyman, 1989, pp. 259~288 참조.

29) Coser, Lewis A., *The Functions of Social Conflict*, New York: The Free Press, 1956, pp. 92~94. 주의전환 이론에 따르면, 임란 및 호란 시기 조선 정권 역시 일본과 후금으로부터의 위협을 활용해 국내정치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당시 조선 정권이 직면한 극도의 대내 취약성을 감안하면 그러한 시도는 정권의 균열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인 전략이라 할 수 없다.

30) 대외 동맹을 통해 내부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려는 행태는 Barnett, Michael N., and Jack S. Levy, “Domestic Sources of Alliances and Alignments: The Case of Egypt, 1962-73.”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5, No. 3, 1991, p. 378 참조.

### III. 임진왜란 및 병자호란기 국내정치와 대외안보

#### 1. 임진왜란: 봉당의 대립과 대일 유화책

16세기 후반 명의 약화와 일본의 부상은 임란을 가능하게 한 허용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히데요시 세력은 통일 전쟁을 수행하면서 무기 회수 및 다이묘 간 전쟁 금지 등을 통해 중앙권력을 급속히 강화하였다.<sup>31)</sup> 또한, 포르투갈로부터 유입된 조총은 히데요시 군대의 전력 강화에 일조하였다.<sup>32)</sup> 히데요시가 일본을 “활과 화살이 엄격한 나라”라고 자부한 반면 명나라를 “소매가 긴 나라(長袖國)”라고 폄하한 사실은 일본군의 우월한 전력을 암시한다.<sup>33)</sup> 이러한 일본의 부상에 비해 명의 세력은 만력제의 태업으로 인한 행정력 부재 및 부패, 둔전(屯田)의 사유화로 인한 변방 지역의 군사력 약화,<sup>34)</sup> 그리고 소위 북로남왜(北虜南倭)로 표현되는 외부로부터의 위협 등으로 약화되기 시작하였다.<sup>35)</sup>

물론, 임란 직전 명이 대일 군사적 억지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다. 척계광(戚繼光)이 주도한 왜구 토벌이 보여주듯이, 명은 여전히 일본을 견제할 물리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실제로 명은 임란 이전 조선과 류큐의 보고를 통해 일본의 중국 침공 의도를 인지했으며, 해안방어 강화나 군사용 선박 축조, 그리고 연해 지역의 자위 조직을 강화하였다.<sup>36)</sup> 문제는 명의 우선적인

31) Fairbank, John K., Edwin O. Reischauer and Albert M. Craig, *East Asia: tradition and transformat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73, pp. 392~399.

32) 쿠바 다카시, “일본군의 선박과 무기의 과학적 검토.” 한일문화교류기금-동북아역사재단 편, 『임진왜란과 동아시아 세계의 변동』, 서울: 경인문화사, 2010, p. 224~227.; 케네스 M. 스워프, “순망치한: 명나라가 참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정두화·이경순 엮음,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서울: 휴머니스트, 2007, p. 320.

33) 호리신, “동아시아 국제관계로 본 임진왜란.”, 한일문화교류기금-동북아역사재단 편, 『임진왜란과 동아시아 세계의 변동』, 서울: 경인문화사, 2010, p. 149-161.

34) 김한규, “임진왜란의 국제적 환경: 중국적 세계질서의 붕괴.”, 정두화·이경순 엮음,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서울: 휴머니스트, 2007, pp. 292~295; 한명기, “임진왜란과 동아시아 질서.”, p. 115.

35) 김현영, “16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왜란 전후 조선사회의 변화.” 『한국사학사학보』 26, 2012, p. 92.

전략목표가 일본의 조선 침공 차단이 아닌 중국 본토의 방어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임란 직전 명이 조선에게 유구 및 섬라 등과 연합해 일본을 공격하라고 요구한 사실이나,<sup>37)</sup> 전쟁 발발 후인 1593년 4월 조선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화회담을 통해 일본군의 철수를 용인한 사실은 이를 시사한다.<sup>38)</sup>

선조 정권은 왜 일본의 침공위협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균형전략을 수행하지 못하였는가? 임란 전 일본은 수차례에 걸쳐 조선에 군사행동 계획을 명확히 전달하였다. 히데요시는 1580년 겐소(玄蘇)를 보내 가도임명의 의지를 밝히며 협력할 것을 요구하였으며,<sup>39)</sup> 1590년 4월 방일했던 조선 통신사 일행은 일본의 침공 의도가 적시된 문서를 가지고 귀환하였다. 또한, 1591년 여름 조선에 온 소 요시토시(宗義智) 역시 대명 군사행동을 밝히며 조선의 협력을 요구하였다.<sup>40)</sup> 선조 정권은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일 균형전략을 구사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물론, 선조정권은 유성룡 주도하에 기존의 군사편제인 제승방략(制勝方略)을 지역 단위의 진관체제(鎭管體制)로 전환하려 했으며, 이일과 신립 등을 지방에 파견해 군사태세를 점검케 하는 등 일정한 전쟁 대비 정책을 취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책은 실질적인 전쟁 역지력 증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진관체제는 제승방략이 “단지 오래 시행됐기 때문에 갑자기 바꾸기 어렵다”는 논리로 채택되지 못했으며, 성을 수축하고 군사태세를 강화하려는 조치는 “공연히 백성을 괴롭힌다”라는 이유로 현실화되지 못하였다.<sup>41)</sup> 임란 직전 유성룡은 “군정의 근본이라든지, 장수를 뽑는 요령이라든지, 군사를 훈련하는

36) 케네스 M. 스위프, “순망치한: 명나라가 참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pp. 321~322/ 327~330.

37) 『선조실록』 25년(1592) 6월 26일 갑인.

38) 『선조실록』 26년(1593) 3월 28일 계미; 4월 20일 갑진;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서울: 역사비평사, 1999, pp. 49~50.

39) 『선조실록』 13년(1580) 12월 21일 경진.

40) 유성룡, 『징비록』, 서울: 역사의 아침, 2010, p. 54.

41) 제승방략은 유사시 중앙에서 파견한 장수가 여러지역의 군대를 소집해 지휘하는 체제로서 대규모 군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강점이 있으나, 군대가 연쇄적으로 붕괴될 수 있는 약점이 있었다. 반면 진관체제는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각 지역이 차단막으로 기능함으로써 연쇄적 붕괴 상황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선조수정실록』 24년(1591) 10월 1일 계사; 유성룡, 『징비록』, pp. 40~41.

방법 같은 것은 백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도 정돈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자평하였는데, 이는 당시 군사태세의 난맥상을 명확히 드러낸다.<sup>42)</sup>

일본에 대한 과소균형 현상은 봉당간 대립이라는 엘리트 분열, 그리고 내부로부터의 위협을 보다 경계했던 선조 정권의 대내 취약성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무엇보다 임란 직전 동서 봉당 세력은 각각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본의 위협을 상반되게 해석하고 상대편 공격에 활용하였다. 1582년 서인 이이의 내정개혁 및 국방강화에 대한 동인 유성룡의 반대는 이를 시사한다. 유성룡은 이이의 주장을 “군사를 양성하는 것은 화단을 키우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개혁논의를 무력화시켰다. 그러나 유성룡은 장령 홍가신과의 사적 대화에서 자신 역시 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이이의 재주로는 그 일을 해내지 못할 것이 염려될 뿐”이라고 발언하였다. 애초 이이의 대비책에 대한 유성룡의 반대가 파당의 논리에 종속됐음을 반증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이이가 “유성룡의 재주와 기개가 참으로 특출하지만 우리와 더불어 일을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것이라든지, 전쟁 발발후 유성룡이 이이의 ‘선견지명’을 높이 평가하고 자신의 행태를 후회한 사실 등도 안보문제에 정파의 논리가 우선시됐음을 보여준다.<sup>43)</sup>

1591년 서인 조현의 상소를 둘러싼 대립도 안보의 정쟁화 현상을 보여준다. 조현은 일본의 침공 의도를 명에 알리고 동시에 전쟁에 대비할 것을 상소하면서 이런 주장이 봉당의 논리로 배척되면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세자책봉(建儲議) 문제로 실권을 장악한 동인 세력은 “서인들이 세력을 잃었기 때문에 인심을 요란시키는 것”이라며 조현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아울러, 일본의 침공가능성을 둘러싼 통신사 황윤길(서인)과 김성일(동인)의 대립 역시 안보문제의 정쟁화를 보여준다. 동인세력은 황윤길의 전쟁가능성 주장을 “공연히 인심을 동요시킨다”라는 이유로 강력히 반박하였다.<sup>44)</sup> 특히, 김성일이 유성룡에

42) 유성룡, 『장비록』, p. 42.

43) 『선조수정실록』 15년(1582) 9월 1일 병진.

44) 『선조수정실록』 24년(1591) 3월 1일 정유.

게 자신도 일본의 침공가능성을 알고 있지만, “황윤길의 말이 너무 지나쳐 인심이 놀라 당황할 것이므로 이를 해명했을 뿐”이라고 발언한 사실은 안보가 ‘진영논리’에 종속됐음을 반증한다.<sup>45)</sup>

동일한 맥락에서, 김성일은 영남지역에서 전쟁방비로 민심이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배척당한 자들이 원한이 골수에 사무쳐 틈을 타 자기들의 뜻을 풀려고 한다”라고 비난하였다.<sup>46)</sup> 이러한 발언은 서인세력이 일본의 침공가능성을 과장해 정치적 입지를 만회하려 한다는 집권 동인세력의 인식을 드러낸다. 동시에 과도한 전쟁 대비가 민심을 악화시켜 정권의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동인세력의 경계감 역시 시사한다. 최종 정책결정권자인 선조 역시 이러한 동인세력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전쟁대비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려 하였다. 선조는 이일을 경상 우병사로 파견해 전란에 대비하자는 동인 유성룡의 건의조차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일과 신립은 전쟁 직전야 지방에 파견 될 만큼 기민한 전쟁 대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sup>47)</sup>

사실, 동서 봉당의 대립 심화의 근저에는 이들에 분할지배를 통해 군주권을 강화하려는 선조의 권력의지가 존재한다. 1589년 정여립 역모 사건(己丑獄事)과 1591년 왕세자 책봉 문제(建儲議 사건)에 대한 선조의 행태는 이를 뒷받침한다. 선조는 정여립 사건을 활용해 집권세력인 동인을 대거 숙청함으로써 그 세력의 비대화를 차단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이산해와 유성룡은 배척하지 않으므로써 서인 세력의 비대화 역시 차단하려 하였으며, 실제로 건저의 사건을 통해 서인 세력을 대거 실각시켰다.<sup>48)</sup>

전쟁 발발 이후 상황에서조차 선조는 인사권 전횡을 통해 군주권 강화를 시도하였다. 선조는 전쟁 발발 직후인 5월 2일 각각 동인 이산해와 유성룡을 전

45) 유성룡, 『장비록』, p. 31.

46) 『선조수정실록』 24년(1591) 11월 1일 계해.

47) 유성룡, 『장비록』, p. 46.

48) 『선조실록』 22년(1589) 12월 9일 임오; 『선조실록』 22년(1589) 12월 14일 정해; 이상혁, “조선조 기축옥사와 선조의 대응.” 『역사교육논집』 43권, 2009, pp. 569~579.

쟁 방지와 파천의 책임을 물어 실각시켰다. 선조는 자신이 애초부터 전란을 우려했는데, 유성룡이 민폐를 거론하며 방비를 허술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하였다.<sup>49)</sup> 상술한 바와 같이, 전쟁전 유성룡의 전란대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선조 자신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제 유성룡을 전쟁 책임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든 것이다. 동시에 선조는 최홍원과 윤두수를 각각 영의정과 좌의정에 임명하고 유배중이던 정철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서인 세력을 재등용하였다.<sup>50)</sup> 이후에도 선조의 비일관적인 인사권 전횡은 계속되었다. 선조는 6월 초 유성룡을 재기용했으며, 전쟁 예측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성일에 대한 압송지시를 내린 직후 그를 다시 초유사로 임명하였다.<sup>51)</sup> 또한 선조는 이순신을 탄압하고 1598년 유성룡을 다시 파직하였다.

선조의 반복적인 선위 정국 조성도 그의 공고한 권력의지를 반증한다. 선조는 선위에 대한 신하들의 반대를 이끌어냄으로써 군주권을 확고히 하려 했던 것이다. 승정원은 “이 환란을 극복할 그날을 기대하는 것은 오로지 성상의 신모예산(神謀睿算)만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라며 선위를 강력히 반대하였으며, 윤두수 등은 국가패망 상황에서 충성을 다하지 못해 “성상께서 홀로 위에서 걱정하게만 하였으므로 신들의 죄는 한번 죽어도 아까울 게 없습니다”라고 대죄한 사실 등은 이를 시사한다.<sup>52)</sup> 선조가 정작 선위를 요구하는 상소에 대해서는 적에 대한 섬멸이 우선이라며 거부했다는 사실 역시 선위 정국의 정치성을 반증한다.<sup>53)</sup>

의병에 대한 선조의 탄압 역시 동일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sup>54)</sup> 선조는 전쟁 초기 정인홍, 김면, 곽재우 등 의병장에게 신속하게 관직을 제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병을 규합하려 하였다.<sup>55)</sup> 그러나 전쟁이 교착국면으로 접어들자, 일

49) 『선조실록』 25년(1592) 5월 2일 신유.

50) 유성룡, 『장비록』, p. 103.

51) 유성룡, 『장비록』, pp. 66~69.

52) 『선조실록』 25년(1592) 11월 8일 갑자.

53) 『선조실록』 25년(1592) 11월 7일 계해.

54)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군주는 내적과 외적을 동시에 경계해야 할 합리성을 갖는다. 니콜로 마키아벨리 씀, 강정안·김경희 옮김, 『군주론』, 서울: 까치, 2012, pp. 124~125.

부 의병이 관가와 백성을 겁락한다는 폐단을 거론하며 관군에 분속시키는 등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sup>56)</sup> 특히, 선조는 의병 이몽학의 난에 김덕령이 연루됐다는 혐의를 물어 친국하고 살해하기까지 하였다.<sup>57)</sup>

선조는 엘리트 정치세력뿐만 아니라 반민(叛民)으로 표현되는 기층으로부터의 위협도 강력히 경계하였다. 전쟁발발 직후 “경상도 사람들이 다 배반하였는데 사실인가? 절반은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라는 그의 발언은 이를 반증한다.<sup>58)</sup> 또한, 선조는 “오늘날의 우려는 단지 왜적의 재침에 있을 뿐만이 아니니 성중의 내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거나, “나라 밖의 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날 화가 염려스럽다”고 주장하며, 내란 차단을 위해 명군 주둔이 필요하다고까지 강조하였다.<sup>59)</sup> 선조의 파천 직후 서울의 군민들이 “임금(왜군)이 이제 왔으니 살았다. 기꺼이 적군을 맞이할 것”이라거나 실제 궁성 대부분을 방화했다는 사실은 임란기 선조 정권의 대내 취약성을 반증한다.<sup>60)</sup>

이와 같이, 엘리트간 분열 및 정권의 대내 취약성으로 인해 선조 정권은 과비용을 초래할 대일 균형전략을 수행할 수 없었다. 선조 정권은 명이 유구 및 섬라 등과 연합해 일본을 공격하라고 요구하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타는 데 서툴고 바다에 익숙지 않아 오직 수비만을 도모하고 있을 뿐”이라며 미온적으로 대응하였다.<sup>61)</sup> 동시에 선조 정권은 통신사 파견과 같은 저비용 유화책을 통해 일본의 위협을 관리하려 하였다. 선조가 통신사 파견을 정당화하면서 “그 흉역(凶逆)스럽고 경망한 자들이 우리 강토를 침범하여 그 유감을 풀려고 한다면, 이 다음 변방의 걱정거리를 이루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55) 『선조실록』 25년(1592) 6월 29일 정사.

56) 『선조실록』 25년(1592) 11월 1일 정사; 11월 13일 기사.

57) 김강식 “임란시 의병전쟁”,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편,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서울: 경인문화사, 2005, pp. 315~316.

58) 『선조실록』 25년(1592) 5월 3일 갑술; 5월 4일 계해.

59) 『선조실록』 26년(1593) 6월 14일 정사; 『선조실록』 32년(1599) 2월 2일 임자;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pp. 76~77.

60) 『선조실록』, 25년(1592) 5월 14일 계유; 『선조수정실록』 25년(1592) 4월 14일 계묘.

61) 『선조실록』 25년(1592) 6월 26일 갑인.

사실이나,<sup>62)</sup> 유성룡이 “하삼도가 적지천리(赤地千里)인 상황에서 한 지방에 일이 발생한다면 팔도가 소동”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통신사 파견을 강력히 건의한 사실은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sup>63)</sup>

## 2. 병자호란: 인조반정과 대후금 유화책의 ‘딜레마’

호란의 허용적 원인 역시 명청간 세력전이라 할 수 있다. 구조적으로 명 세력의 약화는 패권안정(hegemonic stability) 이론이 설명하듯이 명에 대한 주변국의 과도한 무임승차로부터 비롯된 측면이 있다.<sup>64)</sup> 명이 조선의 일년삼공(一年三貢) 요구를 삼년일공(三年一貢)으로 제한하였다는 사실은 명 스스로도 패권비용의 과도화에 대해 우려했음을 보여준다.<sup>65)</sup> 또한 임란기 조선으로의 대규모 파병과 같은 상황변수 역시 명의 재정상황을 악화시켰다.<sup>66)</sup> 동시에 격화된 엄당(嚴黨)과 동림당(東林黨) 간의 대내 권력투쟁은 유력한 군사령관 원숭환(袁崇煥)의 실각에서 나타나듯 명의 안보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다.<sup>67)</sup>

명의 세력약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누르하치의 건주여진은 기타 여진 부족을 통합하면서 급속히 세력을 확대하였다. 역설적으로 이 과정에서 명의 라오동 총병관 이성량(李成良)은 누르하치의 정치적 후원자로서 그 세력강화에 일조하였다. 이성량은 누르하치로부터 모피와 인삼 등 막대한 이윤을 상납받는 대가로 그에게 좌도독(左都督)이나 용호장군(龍虎將軍) 같은 관직을 제공하였으며, 심지어 압록강 부근의 관전육보(寬奠六堡) 일부를 포기하기까지 하였다.<sup>68)</sup>

62) 『선조실록』 22년(1589) 8월 4일 기묘.

63) 『선조실록』 22년(1589) 9월 9일 계축.

64) 주변국의 무임승차가 패권국의 재정약화 등 패권질서의 균열을 초래한다는 설명은 Gilpin, Robert,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pp. 156~159 참조.

65) 김한규, “임진왜란의 국제적 환경: 중국적 세계질서의 붕괴.” pp. 308~310.

66) 임진왜란이 명의 쇠퇴를 촉진시켰다는 분석은 Clark, Donald N., “Sino-Korean Tributary Relations under the Ming.” In Denis Twitchett and Frederick W. Mote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Part 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p. 272~300. 참조.

67) 王榮滄, “袁崇煥與明天后朝黨爭.” 『學術研究』 第1期, 2022, pp. 131~141.

따라서, 1608년 이성량의 실각은 명-후금 관계를 급속히 경색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 누르하치는 그해 대명관계를 단절하고 1616년 후금을 건국한 직후 칠대한(七大恨)을 갚는다는 명분으로 대명 전쟁을 개시하였다. 특히, 후금은 팔기군이라는 효율적인 군사-행정 시스템을 활용해 1622년까지 랴오양 및 광녕 등 랴오동 전역을 장악하는 등 점령지역을 급속히 확대하였다.<sup>69)</sup>

동시에 후금은 조선 영내에 주둔하며 간헐적으로 후금을 공격하던 모문룡(毛文龍) 세력을 둘러싸고 조선과 대립하기 시작하였다. 후금은 명-조선 연합군의 랴오동 협공 가능성을 경계하였던 것이다.<sup>70)</sup> 특히, 모문룡 군에 대한 인조 정권의 지원 강화는 후금의 위협인식을 심화시키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sup>71)</sup> 1627년 정묘호란 당시 “조선이 모문룡을 숨겨주고 그에게 식량을 지원했다”라는 후금의 전쟁 명분은 이를 뒷받침한다.<sup>72)</sup>

왜 인조 정권은 명청간 세력전이와 후금의 위협이 명확해지는 상황에서 호란을 차단하지 못하였는가? 호란전 인조정권이 군사력 확장을 통해 대후금 균형전략을 모색하였거나, 그러한 군사 대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모문룡 세력에 대한 거리두기, 그리고 1636년 4월 홍타이지의 칭제를 수용했다면 전쟁을 사전에 차단했을 가능성은 상존한다.

물론, 당시 명의 붕괴 가능성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후금으로의 전면적 편승이 과연 현실적이었는가라는 반론이 가능하다.<sup>73)</sup> 그러나 전임 광해군 정권이 후금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시기에도 대후금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인조 정권의 대후금 정책이 합리적이라 평가하는 어렵다. 애초 광해군은 후금이 “천하난적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

68) 기시모토 미오·미야지마 히로시 지음, 김현영·문순실 옮김, 『조선과 중국 근세 오백년을 가다』, 서울: 역사비평사, 2003, pp. 191~194, 200; 황지영, “이성량사건을 통해서 본 17세기 초 원동정세의 변화.” 『조선시대사학보』 21, 2002, pp. 11~22.

69)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pp. 261~264.

70) 『광해군일기』 13년(1621년) 7월 26일 을축.

71)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pp. 375~378.

72) 『인조실록』 5년(1627) 4월 1일 정유; 李鴻彬, “试论‘丁卯之役.’” 『社会科学战线』 第4期, 1987, p. 194.

73) 이러한 반론은 구범진, 『병자호란, 홍타이지의 전쟁』, pp. 66~67 참조.

라고 경계하면서 장수선발 및 훈련, 봉화정비, 군량 비축 등 서북지방 방어를 강화하는 자강책과 동시에 후금에 대한 ‘기미책’을 구사해 안보위기 관리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sup>74)</sup> 모문룡 군대를 철산 앞 가도로 들어가도록 유도함으로써 모문룡 군과 후금군의 충돌을 차단하려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sup>75)</sup>

특히, 1619년 심하전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광해군 정권은 전쟁상황에 서조차 대후금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 하였다. 광해군 정권은 반복된 명의 파병요구를 군사력이 취약하고 왜의 위협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파병보다는 국경에 주둔해 측면에서 후금군을 공략하겠다는, 황제의 공식적인 칙서를 요구하면서 회피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sup>76)</sup> 광해군은 조선군을 파병하는 상황에서도 사령관 강홍립에게 “중국 장수의 말을 그대로 따르지만 말고 오직 패하지 않을 방도를 강구”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조선군은 실제로 전투 중 대규모 투항을 감행하였다.<sup>77)</sup> 이후 후금조차 조선의 파병을 임란 당시 명의 원병에 대한 불가피한 보답이라고 인정했던 사실은 그만큼 광해군 정권의 기민한 외교를 반증한다.<sup>78)</sup>

광해군 정권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후금에 대한 균형전략을 구사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기미책으로 표현되는 유화책이 주요한 대후금 전략이었다. 따라서 결국 ‘어떤’ 유화책인가라는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그러한 유화책이 조선의 안보위기 해소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 인조정권 역시 광해군 정권과 유사하게 대후금 군사적 균형 전략보다는 유화정책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인조정권의 유화책은 일관적이지 못하고 심지어 정책들 상호간 모순되는 양상을 보이기에까지 하였다. 스웰러가 과소균형의 특징 중 하나로 설명한 ‘비효과적인 반쪽짜리 정책(ineffective half measures)’의 전형적 특징을 보였던

74) 『광해군일기』 [중초본] 11년(1619) 12월 22일 신미.

75)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pp. 285~286.

76) 『광해군일기』 [중초본] 10년(1618) 5월 2일 기축; 『광해군일기』 [중초본] 10년(1618) 7월 4일 경인.

77) 『광해군일기』 [중초본] 11년(1619) 2월 3일 정사; 『광해군일기』 [중초본] 11년(1619) 3월 12일 을미;

『광해군일기』 [중초본] 11년(1619) 4월 2일 을묘.

78)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pp. 236~237.

것이다.

이러한 인조 정권의 대후금 전략 실패는 반정 정권에 내재된 정치적 취약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인조 정권은 광해군이 명을 배반하고 오랑캐와 화친해 조선을 “금수의 나라”로 만들었다는 것을 반정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광해군 정권과 같은 효과적인 유화정책을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반정 교서가 적시한 광해군 폐위의 이유는 폐모살제, 무리한 궁궐 공사, 간신기용 및 부패, 백성에 대한 수탈, 그리고 명에 대한 배반이었는데, 이 중 대명 의리를 배반했다는 내용이 교서의 1/4을 차지할 정도로 대명 사대는 반정의 핵심 명분이었다.<sup>79)</sup> 특히, 인조 개인으로서도 반정으로 옹립된 자신의 취약한 권력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반정 명분을 고수해야할 필요성이 있었다. 호란이 종결된 이후에도 인조가 반정공신들의 일탈행위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인조의 정치적 위상이 취약했음을 반증한다.<sup>80)</sup>

더욱이 당시 조선의 대다수 엘리트 계급이 중화 문명의 구현자임을 자부했다는 사실 역시 대후금 유화정책 추진에 구조적 장애가 되었다.<sup>81)</sup> 뿐만 아니라 후금에 대한 기층의 적대감도 일정하게 확인된다. 1636년 2월 조선에 왔던 용골대 일행이 인조를 접견하지 못하고 돌아갈 때 “구경하는 관중이 길을 메웠는데, 여러 아이들이 기와 조각과 돌을 던지며 욕을 하기도 하였다”라는 사실이나, 윤휴가 인조에게 “서북방의 군사들이 모두 한번 싸워보기를 원한다”라고 발언한 것 등은 이를 시사한다.<sup>82)</sup>

이와 같다면, 전면적인 대후금 편승이나 유화정책은 그만큼 인조정권에게 정치적 리스크로 간주됐을 가능성이 크다. 호란 직후 인조의 발언은 이를 암

79) 『광해군일기』 [중초본] 15년(1623) 3월 14일 갑진.

80) 『인조실록』 20년(1642) 12월 10일 을해.

81) 허태구, “丙子胡亂 이해의 새로운 시각과 전망- 胡亂期 斥和論의 성격과 그에 대한 맥락적 이해.” 『규장각』 47호, 2015, pp. 190~193. 광해군 시기조차 엘리트 계급은 대후금 유화책에 강력한 반감을 드러내었다. 인목대비 폐위에 대한 지지 상소에 비해 후금과의 화친을 주장하는 상소가 인조반정 이전 5년간 한 건도 제기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보여준다.; 계승범, “계해정변(인조반정)의 명분과 그 인식의 변화.” 『남명학연구』 26권, 2008, pp. 448~453.

82) 『인조실록』 14년(1636) 2월 26일 신축; 8월 2일 계유.

시한다. 인조는 애초 척화를 주장했던 “연소한 이들의 사려가 얇고 너무 과격” 하였으며, 애초 용골대 일행을 배척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당시의 척화 논의가 ‘정론’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한 것이다.<sup>83)</sup>

인조정권의 상호 모순된 대후금 정책은 이러한 상황의 논리적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임란 당시 일본의 위협 자체에 대한 엘리트 간 이견과 달리 호란 직전 인조 정권의 엘리트들은 후금의 압도적 전력과 위협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였다. 예를 들어, 인조가 1636년 6월 17일 후금(청)에 보낸 격서에서 “궁벽한 바다 모퉁이에 있는” 조선이 “무슨 이길만한 형세가 있어 귀국을 능멸하게 맹약을 깨겠는가”라고 항변한 것은 이를 보여준다.<sup>84)</sup> 사실, 이러한 위협인식은 광해군 대의 대후금 위협인식과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광해군 역시 조선의 국세가 “털끝만큼도 믿을게 없기 때문에” 후금을 단지 고론담봉(高論談鋒)으로 격으려 한다면 조선의 멸망은 필연적이라며 극도의 위협감을 드러내었다.<sup>85)</sup>

문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인조정권의 대후금 위협인식이 반정 명분과 상충되면서 상호 모순된 대후금 정책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인조 정권은 후금을 상종하지 못할 오랑캐로 폄하하면서도 동시에 기미책을 구사하였으며, 또한 모문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후금과의 전면 대결은 회피하려 하였던 것이다.<sup>86)</sup>

소위 ‘절화교서’ 사건은 이러한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636년 2월 말 용골대가 내방해 흥타이지의 칭제에 조선의 동참을 요구하자 인조는 사신 일행을 접견하지 않았다. 이에 불만을 품은 용골대가 귀국하자 인조는 전국에 절화교서를 내려 오랑캐가 황제를 참칭하는 글을 보내왔으나 절대 수용치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심지어 인조 정권은 “장차 한번 기운차게 일어나 이 치

83) 『인조실록』 14년(1636) 12월 17일 정해.

84) 『인조실록』 14년(1636) 6월 17일 경인.

85) 『광해군일기』 [증초본] 11년(1619) 4월 11일 갑자.

86)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pp. 361~365.

욕을 씻을 것”이라며 전쟁 의사를 피력하기까지 하였다.<sup>87)</sup>

그러나 동시에 인조 정권은 후금에 회답사를 보내 “베푸신 성대한 정의가 실로 특별한 것이었으니 감사하기 이를 데 없다”라거나, “넓은 도량으로 포용하시는 성대한 뜻을 볼 수 있었는데, 기쁨이 끝이 없었다”라며 유화적 태도를 보였다. 또한, 인조는 자신이 용골대를 접견하지 못한 것은 병환 때문이었으며, 단지 문제가 됐던 것은 용골대와 함께 온 서달(몽골) 장수들의 무례한 서신 때문이라고 항변하였다. 일개 후금의 대신들과 몽골 관료들이 조선 국왕에게 서신을 보낸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는 논리였다.<sup>88)</sup> 사실, 절화교서는 애초 후금에 전달될 목적이 아니라 후금의 위협을 활용해 대내 결속을 도모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작성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귀국하던 용골대 일행에게 절화교서가 탈취당하는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후금을 자극했던 것이다.<sup>89)</sup>

이후 전쟁 발발이 가시화되자 인조 정권은 비로소 전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회피하려는 행태를 보이면서 삼사 등 척화파 세력을 억압하기까지 하였다. 인조는 수찬 오달제가 화친을 주장하는 최명길을 논박하자, 1품 공신을 “젓비린 내 나는 어린 사람이 모욕을 준다”라는 죄목을 들어 파직하였다.<sup>90)</sup> 결국 최명길이 사직하자 인조는 비난한 자들을 엄중하게 추고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부교리 윤집이 상소를 통해 화친 반대론자들이 억압적인 분위기가 두려워 모두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한 사실은 당시의 상황을 보여준다.<sup>91)</sup>

특히, 이러한 전쟁 회피 전략은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김류나 최명길 같은 공신세력(勳西)이 주도하였다. 반면, 김상헌 등 반정에 참여하지 않은 서인 세력(淸西), 윤희 및 정은 등 반정 후 복권세력, 그리고 홍익한과 윤집 등 반정

87) 『인조실록』 14년(1636) 3월 1일 병오.

88) 『인조실록』 14년(1636) 2월 16일 신묘; 『인조실록』 14년(1636) 2월 26일 신축; 『인조실록』 14년(1636) 3월 3일 무신.

89) 『인조실록』 14년(1636) 3월 7일 임자.

90) 『인조실록』 14년(1636) 10월 1일 임신.

91) 『인조실록』 14년(1636) 11월 8일 무신.

후 등용된 세력은 화친을 강력히 반대하였다.<sup>92)</sup> 공신세력의 입장에서는 전쟁이 실제 발발할 경우 압도적 전력 차이로 인한 패배 및 정권 붕괴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쟁 회피가 합리적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결국 11월 중순 인조는 비변사가 제안한 사신 파견 및 최명길의 화친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기미책을 공식화하였다.<sup>93)</sup> 이조참판 정온과 삼사가 이에 강력히 반발하자 인조는 “의논하여 나온 조치이니 심사숙고하고 우려하지 말라”며 화친의 뜻을 고수하였다.<sup>94)</sup> 그러나 공교롭게도 조선 사신 박로가 후금에 도착하기 전인 12월 9일 후금이 침공을 감행함으로써 기미책은 실패로 귀결되었다.<sup>95)</sup>

인조 정권이 전쟁을 회피하려 한 배경에는 기층으로부터의 위협 차단이라는 목적도 내재돼 있었다. 인조 정권은 과도한 전쟁 준비가 내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우려하였다. 부제학 정온이 “훈신들의 부귀가 극도에 이르러 살려는 마음만 있고 죽음으로써 지킬 계획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내란이 있을까 걱정스럽다는 말로 성상의 귀를 현혹시켜 자기네의 목숨을 보전하려 한다”고 비판한 사실은 이를 암시한다.<sup>96)</sup> 대사간 윤희가 인조에게 평양에 진주해 전쟁대비에 나설 것을 요구하자, 인조가 “민력이 감당하지 못하여 혹시 내란에 이르지 않을까 두렵다”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한 사실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sup>97)</sup>

동일한 맥락에서, 인조는 남한산성 농성과 항복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내부로부터의 위협을 경계하였다. 인조는 1637년 1월 21일 홍타이지에 보낸 국서에서 “예로부터 국가가 망한 이유가 오로지 적병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오늘날의 인정을 살펴 보건대 반드시 신을 임금으로 떠받들려 하지

92) 공서와 청서의 구분과 다수의 사류(士類)가 공신세력에 편승했다는 설명은 이진창 저, 김용홍 역해, 『당 의통략』, 파주: 아카넷, 2020, p. 95. 참조.

93) 『인조실록』 14년(1636) 11월 15일 을묘: 『인조실록』 14년(1636) 11월 16일 병진.

94) 『인조실록』 14년(1636) 11월 21일 신유.

95) 『연려실기술』 제25권, 인조조 고사본말.

96) 『인조실록』 14년(1636) 3월 2일 정미.

97) 『인조실록』 14년(1636) 8월 20일 신묘.

않을 것이니, 이것이 신이 크게 두렵게 여기는 바”라고 주장하였다. 자신이 항복하면 정권이 내부적으로 붕괴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sup>98)</sup> 실제로 신경진, 구굉, 구인후 등 일단의 반정공신들이 훈련 군병들을 사주해 인조의 거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척화론자들을 청 진영에 잡아 보내 전쟁을 끝내라는 요구였다.<sup>99)</sup> 이렇다면 1월 30일 인조의 출성은 내부로부터 자신의 위상이 위협받는다든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인조가 홍타이지에게 신변보장을 문서로 요청하고 홍타이지가 이를 수용하자 즉각적으로 출성하였다는 사실은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sup>100)</sup>

#### IV. 결론

구조적 현실주의의 맥락에서 임란과 호란은 각각 일본의 부상 및 명청 세력 전이와 같은 국가간 세력변화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아시아 세력관계 변화는 임란 및 호란을 가능하게 한 허용적 원인이라 할 수는 있지만, 양 전쟁의 충분조건이라 할 수는 없다. 즉, 양 전쟁 이전 조선이 군사적 균형전략 등 ‘기민한’ 전쟁 대비를 수행하였다면, 전쟁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혹은 그 피해를 최소화했을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다.

임란 및 호란시 조선의 과소균형 배경에는 엘리트 분열과 정권의 대내 취약성이라는 국내정치적 요인들이 존재한다. 임란 시기 선조 정권은 동서 봉당간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일본의 위협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종속됨으로써 균형전략 대신 통신사 파견과 같은 저비용 유화책을 선호하였다. 특히, 선조는 봉당에 대한 분할지배나 전쟁 이후 의병에 대한 탄압, 그리고 기층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경계 등 대내 권력 유지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98) 『인조실록』 15년(1637) 1월 21일 신유.

99) 『인조실록』 15년(1637) 1월 26일 병인.

100) 『인조실록』 15년(1637) 1월 27일 경묘; 1월 28일 무진; 1월 30일 경오.

드러냄으로써 적절한 대일 균형전략을 수행하는데 실패하였다.

호란 시기 인조 정권내 엘리트 세력은 후금의 위협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를 이루고 있었으나,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행하는 데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그 배경에는 대명 의리를 명분으로 집권한 반정 정권의 대내적 취약성이 있었다. 반정 명분을 고수할 필요성과 압도적 전력을 보유한 후금과의 전쟁은 회피해야할 필요성이 서로 길항관계를 이루면서 전면적인 유화 정책도, 그리고 민심이반을 우려한 군사적 대비도 실패한 것이다.

한편, 본 논문은 분석은 19세기 청일전쟁 사례 분석에도 일정한 함의를 제공한다. 청일전쟁기 고종 정권 역시 일본의 위협 및 조선의 상대적 능력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내부로부터의 위협 견제를 우선시함으로써 전쟁 역지에 실패했다는 분석이 가능한 것이다. 고종 정권이 동학이라는 내부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청의 군사개입을 요청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사실, 동학세력 그 자체는 고종 정권에 심각한 위협이라 할 수는 없다. 동학 농민군의 목표는 역성혁명이 아닌 ‘국왕 환상’에 기초한 근왕과 민본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sup>101)</sup> 그러나 고종 정권은 정적인 대원군 세력이 동학군의 배후라는 상황을 위협적으로 인식하면서 전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청의 군사개입을 요청하였던 것이다.<sup>102)</sup>

이상의 논의는 어떠한 현재적 함의를 갖는가? 무엇보다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을 적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내정치 변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현실주의 시각은 일반적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을 강대국간 세력균형의 종속변인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2천년여 간 한반도 안보가 특정 강대국의 패권적 통제에 놓여 있다거나, 강대국 사이의 세력균형에 의해 결정됐다는 모겐소(Hans Morgenthau)의 주장은 그 전형이라 할 수 있다.<sup>103)</sup> 그러나 이러한 구조 결정론적 시각은 단위 수준의 변인에 대한 분석을 간과함

101) 조경달 지음, 허영란 옮김, 『민중과 유토피아』, 서울: 역사비평사, 2009, pp. 114~133.

102) 황현 지음, 임형택 외 옮김, 『역주 매천아록 상』,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9, p. 340.

103) Morgenthau, Hans, *Politics among Nations: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mcGraw-Hill, 1993, pp. 192~193.

으로써 그만큼 현상을 적확히 설명하는데 한계를 보인다. 본 논문은 강대국간 세력관계를 허용적 원인으로 설정하고, 그러한 구조속에서 한반도 국내정치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때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보다 적확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안보 정책 수립의 측면에서 본 논문은 안보전략이 정쟁화될 경우 적실한 전략 수립이 난관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현재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속에서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친미 혹은 친중 담론이 생산·유통된다는 사실에는 일정한 비판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안보 담론은 미중관계의 다층적 현실을 간과하는 오류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미중관계가 사활적인 패권경쟁이 아니라 자본주의 국제질서의 안정이라는 대전제 속에서의 ‘갈등적 상호의존’ 관계라면, 친미·친중 논쟁은 소모적일 수 있는 것이다.<sup>104)</sup> 향후 한반도 안보 전략 수립 과정에서 현실에 대한 적확한 이해에 기반해 안보문제의 정쟁화를 차단하고 합리적 논쟁과 대안 수립이 필요하다.

104) 미중 간 갈등적 상호의존 관계는 박홍서, 『미중카르텔: 갈등적 상호 의존의 역사』, 서울: 후마니타스, 2020. 참조.

## 참고문헌

- 『광해군일기』 [증초본]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연려실기술』  
『인조실록』
- 계승범, “계해정변(인조반정)의 명분과 그 인식의 변화.” 『남명학연구』 26권, 2008.
- 구범진, 『병자호란, 흥타이지의 전쟁』, 서울: 까치, 2019.
- 기시모토 미오·미야지마 히로시 지음, 김현영·문순실 옮김, 『조선과 중국 근세 오백년을 가다』, 서울: 역사비평사, 2003.
- 김강식, “임란시 의병전쟁.”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편,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서울: 경인문화사, 2005.
- 김명섭·김석원, “관념 충돌로서의 전쟁.” 『국제정치논총』 제53집 3호, 2013.
- 김문자, “임진왜란 연구의 제문제: 임진·정유재란 발발 원인에 대한 재검토.” 『한일관계사연구』 제67집, 2020.
- 김영환, “적대국·동맹국 게임을 통한 병자호란 발발 원인 재해석.” 『한국군사학논집』 제76권 2호, 2020.
- 김종원, “정묘호란시의 후금의 출병동기.” 『동양사학』 제12집, 1978.
- 김한규, “임진왜란의 국제적 환경: 중국적 세계질서의 붕괴.” 정두화·이경순 엮음,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서울: 휴머니스트, 2007.
- 김현영, “16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왜란 전후 조선사회의 변화.” 『한국사학사학보』 제26호, 2012.
- 박현모, “10년 간의 위기: 정묘-병자호란기의 공론정치 비판.”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2호, 2003.
- 박홍서, “국가는 왜 주민 보호에 실패하는가? - 조선기 한반도 분쟁과 국가의 반(反)인민적 행태를 중심으로 사례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7집 2호, 2013.
- 박홍서, 『미증카르텔: 갈등적 상호 의존의 역사』, 서울: 휴머니티스, 2020.
- 유성룡 지음, 이재호 옮김, 『징비록』, 서울: 역사의 아침, 2010.
- 이건창 지음, 김용흠 역해, 『당의통략』, 파주: 아카넷, 2020.
- 이계환, “한국과 일본학계의 임진왜란 원인론에 대하여.”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2권, <https://www.jkcf.or.jp/wordpress/wp-content/uploads/2010/10/2-06k.pdf> (검색일: 2022.2.1).
- 이삼성, 『동아시아 전쟁과 평화 1』, 파주: 한길사, 2009.
- 이상혁, “조선조 기축옥사와 선조의 대응.” 『역사교육논집』 제43권, 2009.

- 이완범, “임진왜란의 국제정치학: 일본의 조선분할요구와 명의 對조선 중추권 확보의 대립, 1592-1596.” 『정신문화연구』 제25권 제4호, 2002.
- 이이 지음, 안외순 옮김, 『동호문답』, 서울: 책세상, 2005.
- 조경달 지음, 허영란 옮김, 『민중과 유토피아』, 서울: 역사비평사, 2009.
- 촌정장개, “임진왜란의 역사적 전제 : 일조관계사를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제7집, 1997.
- 최소자, 『명청시대 중한관계사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7.
- 케네스 M. 스위프, “순망치한: 명나라가 참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정두희·이경순 엮음,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서울: 휴머니스트, 2007.
- 쿠바 다카시, “일본군의 선박과 무기의 과학적 검토.” 한일문화교류기금·동북아역사재단 편, 『임진왜란과 동아시아 세계의 변동』, 서울: 경인문화사, 2010.
- 칼 구스타프 험펠 지음, 전영삼 외 옮김, 『과학적 설명의 여러 측면 2』, 파주: 나남, 2011.
-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서울: 역사비평사, 1999.
- \_\_\_\_\_, “임진왜란과 동아시아질서.”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편,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서울: 경인문화사, 2005.
- \_\_\_\_\_,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서울: 푸른역사, 2009.
- 허태구, “丙子胡亂 이해의 새로운 시각과 전망- 胡亂期 斥和論의 성격과 그에 대한 맥락적 이해.” 『규장각』 제47호, 2015.
- 호리신, “동아시아 국제관계로 본 임진왜란.” 한일문화교류기금·동북아역사재단 편, 『임진왜란과 동아시아 세계의 변동』, 서울: 경인문화사, 2010.
- 황지영, “이성량사건을 통해서 본 17세기 초 원동정세의 변화.” 『조선시대사학보』 제21집, 2002.
- 황현 지음, 임형택 외 옮김, 『역주 매천야록』 상,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9.
- Barnett, Michael N., and Jack S. Levy., “Domestic Sources of Alliances and Alignments: The Case of Egypt, 1962-73.”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5, No. 3, 1991.
- Clark, Donald N., “Sino-Korean Tributary Relations under the Ming.” In Denis Twitchett and Frederick W. Mote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Part 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Fairbank, John K., Edwin O. Reischauer and Albert M. Craig., *East Asia: Tradition and Transformat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73.
- Gilpin, Robert,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 Lebow, Richard Ned., “The Deterrence Deadlock: Is There a Way Out?” *Political Psychology*, Vol. 4, No. 2, 1983.
- Levy, Jack S., “The Diversionary Theory of War: A Critique.” In Manus I. Midlarsky eds., *Handbook of War Studies*, Boston: Unwin Hyman, 1989.

Morgenthau, Hans., *Politics among Nations: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mcGraw-Hill, 1993.

Waltz, Kenneth N.,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9.

\_\_\_\_\_,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Leading: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9.

\_\_\_\_\_, *Realism and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Routledge, 2008.

李鸿彬, “试论‘丁卯之役.’” 『社会科学战线』 第4期, 1987.

王荣滢, “袁崇焕与明天后朝党争.” 『学术研究』 第1期, 2022.

Abstract

Second Image Factors of the Imjin War and Qing's Invasion of Joseon:  
Domestic Vulnerability and the External Underbalancing

Hong Seo Park(Research Professor, Dongseo University)

This paper explains the outbreak of the Imjin War and Qing's Invasion of Joseon as a result of the underbalancing caused by the elite fragmentation and the internal vulnerability of the regime. Right before the Imjin war period, there was no elite consensus to Japan's threat due to intense partisanship between the Western faction and the East faction. In addition, the internal vulnerability of the Seonjo government, which prioritized blocking internal threats to the regime, led it to take an ineffective underbalancing strategy such as diplomatic mission. Meanwhile, before the Qing's invasion in 1636, there was a broad consensus on Qing's rising and its threat to Joseon. However, Injo government failed to carry out conflict prevention strategies such as an active appeasement policy due to its political vulnerability resulted from the pro-Ming China Injo Restoration. In event, these factors led Injo government to take ineffective half measures for preventing Qing's invasion. In the future, the security policy needs to be sought in the basis of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reality and rational debate rather than partisanship.

Keywords: Second Image, Domestic Politics, Permissive Cause, Underbalancing, The Imjin War, Qing's Invasion of Joseon

투고일: 2022년 11월 03일, 심사일: 2022년 11월 24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16일